

“임대차 분쟁 해결에 전북도 나서야”

장학수 도의원 5분자유발언

최근 3년간 법률구조건수 618건
도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촉구

전라북도에 주택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음 1)은 11일 34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은지 10년이 지났지만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세입자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특히 급락인하로 인해 전체 세입자 중 전세는 7.5%로 줄어들고 월세는 20.3%로 증가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매달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만 350건 이상, 법률구조 17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갈등조정을 위해 전북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 의원이 조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라북도의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건수는 총 12,704건이며, 법률구조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송과 변호까지 도와주고 있는 법률구조 건수는 총 618건으로, 년 평균 4,000건 이상의 상담과 200건 이상의 법률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5개 지부와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라북도를 관할



취임식이 끝나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하는 광주지부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4개 광역시도에 이르며, 이들 4개 광역시도 세입자 가구수만 63만7,819구에 달해 전라북도 도민들이 실효적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며 전라북도 산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택임대차분쟁은 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 계약의 갱신·종료, 계약의 이행·해석에 관한 사건 등으로 주로 경제적, 법률적 약자인 임차인의 신청 건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행정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다

양한 형태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있지만 별도로 지자체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도당, 직능 단체들과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1일 대회의실에서 유기만 민주당 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박용화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최우종 전북영세소상공인 대표자 협의회장, 이세우 반GMO 전북공동행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직능 단체별 면담 요청으로 이뤄졌고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마트 노브랜드 진출저지 ▲농촌진흥청 GMO작물 재배 중단 ▲쌀 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이 논의됐다.

최우종 전북영세소상공인 협의회장은 “영세상인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200평 규모이면 어디든 들어설 수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만큼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목소리를 내게 됐다. 대기업의 SSM 진출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박용화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은 “남아도는 쌀이 많다. 올해만 300만톤의 재고가 쌓을 것이라ں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쌀용 쌀 수입은 있을 수 없다”며 “농도인 전북을 위해서라도 정부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도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내각 구성체계가 완벽하게 짜여지지 못했다. 틀이 잡히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쌀용 쌀 수입 중단, 반 GMO 작물 재배 문제 등은 참석하는 분들의 주정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당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대형차 줄임운전 경보장치 의무화 검토’

여름휴가 농·어촌서 보내기 캠페인 제안
법률안 4건·대통령안 12건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줄임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버스의 전방추돌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즉석제안과 그에 따른 토론이 이뤄지자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미철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관련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되, 필요한 안전 대책을 충분히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월 휴가철을 맞이해 각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또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 다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 위원회 운영 및 조사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뉴스

정동영 의원 ‘8·27 전당대회’ 출마선언

“위기에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
“‘당원 주권주의’ 당헌에 명시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1일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겠다. 위기에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며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돌파에는 방향성과 속도감이 중요하다. 제2의 몽골 기병전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겠다”며 “국민의당 지지자와 당원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자부심과 꿈을 찾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존재의 이유는 개혁의 경쟁자여야 한다는 데서 찾아야 하고 개혁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국민의당의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며 “국민주권 실현 전제로서 당원 주권을 확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과 개혁의 경쟁자로 나서야 살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당원 주권주의’ 조항을 당헌에 명시할 것”이라며 “당헌 1조 2항을 신설해 국민의당 당원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당원 주권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거의 12개월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한 것 같은데 이같은 비정상적 운영 속에 ‘이유미 씨 사태’ 같은 불행이 일었다”며 “시스템으로서 당이 운영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위험 요소로 시스템의 첫걸음은 주인 찾기”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당과 보수야당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착과

정에서 개혁 경쟁자로서 역할을 담아내는 것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본”이라면서 “그 점에서 바른정당과도 협력하고 공조할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양심세력, 극우·수구 세력을 뺀 나머지 분들과 함께 청산과 개혁작업에 힘을 합치는 것이 맞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 역할이, 개혁 경쟁자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과 관련,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입장을 밝히겠지만 어렵게 생각한다”면서 “위기관리의 기본은 신속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시간을 천연(遷延)한 것

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했다.

정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입장을 빨리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안타까운 것은, 아침에도 중진 의원 몇 명과 당을 걱정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선거대책기구가 전혀 여과장지 역할을 못 했고, 시스템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색깔 지우기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창당에 안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했고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의당이 당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로 건축물로 본다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재창당에 버금가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엔 행복한 교육공동체

작년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